

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2021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청렴·윤리 경영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신 주요 반부패 정책 자료집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내용 (총 4건)

- ① 국가청렴도 4년 연속 상승 등 반부패·공정 개혁의 가시적 성과 도출(21.5.12)
- ② 국민권익위 “국민과 함께 부패·공약침해 행위 엄단”(21.5.18)
- ③ 국민권익위 “지난 4년간 이동선문고 329회 운영 지구 1.6배(약 65,800km) 달력”(21.5.20)
- ④ 국민권익위 “온라인 행정심판 이용률 4년 연속 증가, 행정심판 접근성 향상”(21.5.24)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부패방지) → 청렴자료실 → 청렴정책 일반

■ 문의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044-200-7619)

[정부 출범 4년] 국가청렴도 4년 연속 상승 등 반부패·공정 개혁의 가시적 성과 도출

- 범정부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반부패·공정 개혁 추진
“국가청렴도 4년 연속 상승, 역대 최고 순위인 33위 기록”

- 이해충돌방지법 정부안 제출 9년 만에 국회 통과,
“200만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방지 행동규범 범제화”

- 우리나라 대표 국가 옴부즈만으로서 사람·현장 중심 고충 해결
“6만 5천여 건 고충민원 처리, 약 16만여 명 권익 구제”

(2021. 5. 12.,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는 범정부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정부 출범 4년간 반부패·공정 개혁을 지속 추진해 국가청렴도가 4년 연속 상승하고 역대 최고 순위인 33위를 기록하는 등 성과를 이뤄냈다.

200만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방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정부안이 제출한 지 9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내년 5월 시행된다.

우리나라의 대표 국가 옴부즈만으로서 사람·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 6만 5천여 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약 16만여 명의 국민 권익을 구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을 맞아 ‘숫자로 보는’ 국민권익위 주요 정책성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범정부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반부패·공정개혁 추진에 앞장서 우리사회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다졌다.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등 범국가적 부패·불공정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 전반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특히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핵심이 되는 두 가지 법을 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약 252조원에 이르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면 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는 ‘공공재정환수법’을 제정해 2020년 1월부터 시행했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당이득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법 시행 후 1년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청구한 공공재정지급금 453억을 환수조치 하는 등 한 푼의 나랏돈도 헛되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국민권익위가 2013년 입안해 국회에 제출한 지 9년 만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해 약 200만 명에 이르는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방지를 위한 행동규범을 법제화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을 포함해 청렴사회를 향한 5개의 강력한 반부패 법 체계가 비로소 완성됐다.

이어 2017년부터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점검’을 실시해 총 613건의 채용비리를 적발, 연루자는 엄중 제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약 3,400여 명에게는 채용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채용비리 근절과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섰다.

또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기존 284개에서 471개로 확대해 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국민권익위는 우리나라의 대표 국가 옴부즈만으로서 전국 방방곡곡을 직접 찾아 사람·현장 중심의 권익구제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4년 동안 약 6만 5천여 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해 위법·부당하거나 소극행정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약 16만여 국민의 권익을 구제했다.

아울러 소송보다 간편하고 빠른 행정심판을 통해 10,538건에 달하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침해된 권익을 구제하고 적극행정에 앞장섰다.

특히 ‘양구군 해안면 민통선 내 토지 소유권 문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갈등 조정’ 등 244건의 집단민원과 사회적 현안 민원을 해결해 10만여 주민과 기업의 숙원을 해결하고 사회갈등을 예방했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이 한 해 950만 건을 넘어섰다.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국민과의 소통 창구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분석하고 235건의 제도를 개선해 국민 불편과 부패유발 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했다.

또 2019년 10월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출범해 여러 기관과 얽혀있는 복합민원을 칸막이 없이 한 곳에서 전문적·종합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센터 개소 이후 약 5만 7천여 건의 민원이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처리됐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 4년 간 국민들의 부패 없는 공정한 사회에 대한 열망과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국민권익위가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우리나라가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반부패·공정개혁을 완수하고, 국민고충과 사회갈등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기관으로 거듭나겠다.” 라고 강조했다.

붙임

“숫자로 보는” 국민권익위 4년 주요 정책성과



숫자로 보는 권익위 4년의 주요 정책성과 | 권익보호 분야

고충민원 6만5천여건을 처리하여 약 16만여명 국민의 권익을 구제

고충민원 6만5천여건

16만여명 권익구제

해결

숫자로 보는 권익위 4년의 주요 정책성과 | 권익보호 분야

소송보다 신속한 행정심판으로 10,538건의 위법·부당처분에 대한 권익침해 해소

행정심판 10,538건

숫자로 보는 권익위 4년의 주요 정책성과 | 권익보호 분야

부패 취약분야 및 고충민원 빈발분야 총 235건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제도개선 235건

숫자로 보는 권익위 4년의 주요 정책성과 | 권익보호 분야

35만명이 참여하는 대표적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활성화

35만명 참여

국민생각함

숫자로 보는 권익위 4년의 주요 정책성과 | 권익보호 분야

한 곳에서 한 번에 '정부합동민원센터' 개소로 5만7천여건의 민원상담 해결

정부합동민원센터 5만7천여건 민원상담 해결

민원 상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선진국 도약을 위한 반부패·공정개혁 완수

국민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국민과 함께 부패·공익침해 행위 엄단”

- 부패·공익신고는 편리하고 넓게
- 신고자 보호는 촘촘하게, 보상은 적극적으로
- 공공재정 비리 환수는 사각지대 없이 체계적으로

(2021. 5. 18.,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정부 출범 4년간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참여, 촘촘한 신고자 보호·보상, 공공재정 비리 환수의 제도화 등을 통해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부패·공익신고는 편리하고 넓게》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공공기관에 부패·공익 신고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신고자 보호·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시스템을 구축·운영했다.

정부 출범 당시 공익신고 대상 법률은 284개였으나, 지난해에는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180여개 중요 법률을 추가해 공익신고 대상과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올해에는 교육·근로현장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4개 법률을 추가해 대상 법률이 총 471개로 확대됐다.

제도 변화와 더불어 국민들의 신고*도 많아져 지난 4년간 총 22,042건을 접수하고 이중 총 10,947건(49.7%)의 신고를 수사·조사기관에 이첩·송부해 부패·공익침해 행위 적발에 기여했다.

* 부패신고 2,130건, 정부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 2,758건, 공익신고 17,154건 등

《신고자 보호는 촘촘하게, 보상은 적극적으로》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의 신분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나 불이익 조치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강화하고 보상금 한도액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했다.

지난 4년간 총 830건의 보호신청을 접수해 총 696건을 처리했고, 신고자들에게 총 194억여 원의 보·포상금을 지급해 신고를 활성화 하는 데에 기여했다.

《공공재정 비리 환수는 사각지대 없이 체계적으로》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약 252조 원에 이르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면 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공공재정환수법」을 제정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했다.

법 시행 후 1년간 부정청구한 공공재정지급금 453억 원을 환수했고, 앞으로 한 푼의 나랏돈도 헛되이 새나가지 않도록 공공재정 비리 환수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지난 4년간 부패·특권 없는 사회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사회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국가 청렴도 상승에도 기여했다고 본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과 함께 신고 심사, 신고자 보호·보상, 공공재정 비리환수 제도를 적극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지난 4년간 이동신문고 329회 운영, 지구 1.6바퀴(약 65,800km) 달려”

- 약 17만여 국민 권익 구제, 234건 집단민원 조정으로 11만여 지역주민 갈등과 숙원 해결
- 사회적 갈등 해결 위한 「집단민원조정법」 제정에 역량 집중

(2021. 5. 20.,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년간 전국 방방곡곡 국민이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329회 운영해 지구 1.6바퀴인 65,800km를 누볐다. 또 지역 숙원인 집단민원 234건을 해결하는 등 약 17만 여 국민의 침해된 권익을 구제했다.

이는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반부패·공정 개혁과 함께 국민과 애환을 같이 하며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은 물론 불합리한 법·제도로부터 침해받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대표 국가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한 결과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에 맞춘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과 적극행정으로 지난 4년 동안 약 6만 8천여 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9,298건의 국민호소를 해결했다.

※ '17.5.~'21.4. 총 2,204건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시정권고와 의견표명
- ('17.5.~)'21.4.)221건 → ('18.)448건 → ('19.)633건 → ('20.)726건 → (~'21.4.)176건

원만한 해결이 곤란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포용사회를 저해할 수 있는 ‘양구 민통선 내 토지소유권 문제’, ‘경주 한센인촌 주거·환경

개선', '음성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갈등', '군산 비안도 도선운항 요구' 등 집단민원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 234건을 '조정' 해결하고 11만여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했다.

음성군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계획에 대한 인접 이천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민원인, 음성군, 이천시 등은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피해 최소화 및 친환경 건축·조경계획의 수립·추진에 합의(20.11.)

세계 최고의 인터넷 보급률과 온라인 민원신청 제도에도 불구하고 고충이 있어도 행정기관을 찾거나 민원신청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총 329회 운영, 8천여 건을 상담하고 4천여 건을 해결해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의 권익구제에 힘썼다.

민원인은 노숙생활을 이어가다가 LH임대주택에 들어간 지 한달 정도 되었고, 고령(48년생), 거동 곤란(폐기능 1/3)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지만, 오랫동안 연락이 단절된 가족들의 재산을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신청에서 탈락되었다며 이에 대한 재심사와 밑반찬 서비스 등의 도움 요청에 대해, ○○시에서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진행하는 한편,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도록 조치(20.8.)

또 기존 고충민원 처리 분야 외에 경찰·국방·기업·금융 분야의 옴부즈만 기능을 강화하거나 새롭게 도입해 도움이 절실한 권익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군장병·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고충해결에 앞장섰다.

(금융고충민원 해결 사례) 단체보험 계약 체결 시 단체 구성원의 개별동의 없이 단체보험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 별다른 조사 없이 민원을 종결한 것은 불합리하므로 단체 구성원의 개별동의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도록 금융감독원에 시정권고(20.4.)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권익구제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현장소통 활동을 강화해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충을 보듬고, 집단민원의 전문적 조정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틀인 「집단민원조정법」이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온라인 행정심판 이용률 4년 연속 증가, 행정심판 접근성 향상”

- 사회적 약자 위한 '무료 심판업무 대리인 지원' 확대
 - 행정심판 결정 이행 안하는 행정청에 금전적 배상 명령하는 '간접강제 제도' 도입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현대제철 조업정지 등 지역 숙원·기업 고충 해소...10,538건 인용 결정
- (2021. 5. 24., 국민권익위)

전국 70개 행정심판위원회를 연계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이용률이 최근 4년 연속 증가해 행정심판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더욱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4년간 행정심판 청구사건 95,189건을 처리해 10,538건을 '인용' 결정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료 심판업무 대리인을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와 행정심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행정청에 금전적 배상을 명령하는 '간접강제 제도'도 도입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정부 출범 후 4년간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 권익을 구제한 성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4년간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10,538건에 달하는 국민의 침해된 권익을 구제했다.

특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 탐방객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약 8천억 원의 기업 매출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현대제철 조업정지명령 취소청구'에 대해 심도 있는 심리로 '인용' 결정함으로써 기업 손실을 예방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행정청에게 금전적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간접강제 제도'를 2017년 10월부터 시행해 권익 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심판업무 대리인을 지원해주는 '국선대리인 제도'와 당사자 간 합의로 갈등을 최소화 하는 '조정' 제도도 2018년 11월부터 시행해 행정심판 사각 지대를 해소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전국 70개 행정심판위원회로 확대한 결과 2016년 28.3%에서 2020년 39.7%로 4년 연속 이용률이 증가해 행정심판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더욱 향상시켰다.

이로써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자신의 청구사건 진행상황과 재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행정심판 제도를 국민들께서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접근성을 더욱 높ی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제도의 사각지대를 꾸준히 개선함으로써 행정심판이 국민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